

달라지는 대부업법 시행령

알기쉬운

Q & A



일반질문



대부이용자



대부업자



지자체 공무원





일반인

개정목적과 주요내용, 시행시기



대부이용자

300만원 초과대출 신청



대부업자

채무증명서 발급, 대부광고 방법, 경고문구 표기



지자체 공무원

종전의 행위에 대한 적용범위



시행시기 등

조문별 개정내용과 시행시기





금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과잉대부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대부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대부업법 및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과잉대부 방지장치 강화'는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11.30 예정)
반면, '대부광고 기준강화' 등 일부는 바뀐 규정에 대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2.28 예정)





‘과잉대부 방지장치 강화’는 모든 금융회사 이용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넘는 대출을 못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300만원을 넘는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의 변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참조)

다만, 대부업체의 판단에 따라 부채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채무증명서의 발급기한과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향후 계약서 작성시 채무증명서 발급기한과 발급비용을 계약서에 미리 표기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과 발급비용은 원칙적으로 양자간 합의로 결정되나 일반 금융회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 옥외간판에도 등록번호, 이자율을 표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영업소의 위치를 표기하기 위한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규정된 대부광고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방송 광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우선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표기하고 글자크기는 해당 광고 최대 글자의 1/3 이상으로 합니다. (복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등록번호만 표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차입에 대한 경고문구는 해당 광고 최대글자의 1/3 이상으로 하고 전체 방송광고 시간의 1/5 이상 노출되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 등 기타 표기에 대한 상세 사항은 개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든 대부광고에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고문구는 방송광고(라디오 제외)의 경우나 일정 크기 이상의 지면광고(150cm²)를 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광고매체와 상관없이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상단에 해당 광고 최대글자 크기의 1/3이상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에 대출잔액이 있는 이용자가 만기연장을 요청할 경우 소득증빙 서류 등을 받아야 하나요?

만기연장을 하면서 추가대출을 신청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출받은 금액 범위 이내에서 단순히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증명서류는 시행령 제4조의3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금액(연금, 카드매출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사본의 경우에도 소득증명 자료로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종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바뀐 규정을 적용하나요?

개정안은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종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종래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만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령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금년 상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조 문	주요 내용	시행시기
제2조의5제3항	▣ 대부업 교육사항에 '대부업자의 광고에 관한 방법'을 추가함	공포후 3개월 경과시점 (20122월말 예정)
제4조제1항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에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추가함	공포후 3개월 경과시점 (20122월말 예정)
제4조의3제2항	▣ 상대방의 변제능력 조사 필요범위를 기존 500만원 초과대출에서 300만원 초과대출인 경우로 변경함	공포즉시 시행 (20111125 예정)
제6조제2항 및 제3항	▣ 대부광고시 게시되는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법 제3조제2항 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로 구체화함 ▣ 대부광고시 해당 대부업체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함 ▣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공포후 3개월 경과시점 (20122월말 예정)
제6조의2	▣ 대부업자의 광고기준을 별표 1에 마련함	공포후 3개월 경과시점 (20122월말 예정)
제6조의3	▣ 일반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허위·과장광고 유형에 포함함	공포후 3개월 경과시점 (20122월말 예정)
제7조의2제1항	▣ 대부거래자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을 금감원의 직권검사 범위에 추가함	공포즉시 시행 (20111125 예정)
제11조의2제4항	▣ 대부협회의 업무에 대부광고 자율심의와 대부업자 등의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를 추가함	공포즉시 시행 (20111125 예정)
별표 2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함	공포즉시 시행 (20111125 예정)

